

요약 및 정책건의

1 연구의 개요

- 정부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, 대도시와 중소도시, 도시와 농촌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정책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하였다.
- 이 연구는 지역행복생활권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여 서울대도시권 차원에서 생활권 구성방안을 제시하고,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. 이를 통해 중앙정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.

2 지역행복생활권의 서울시 도입방안

- 지역행복생활권은 기초인프라, 일자리, 교육·문화·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일상생활의 공간을 의미한다. 지역행복생활권이 기존 지역정책과 가장 차별되는 것은 지자체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인접한 시군구가 공동으로 연계 협력하여 주민의 실제 생활영역을 담아낸다는 점이다.
- 서울시는 행정구역상 서울시뿐 아니라 인접한 인천·경기와 밀접한 연관성과 유사성을 갖고 있어, 지역행복생활권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서는 서울대도시권으로 확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.
- 서울대도시권의 지역생활권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, 지리적 연계와 주거이동과 통근통행 등 기능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실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‘동북생활권’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.
- 서울대도시권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숙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, 지자체별로 계획 중인 사업을 검토하여 함께 추진하거나, 행정경계와 생

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 동북 생활권에서는 하천살리기 사업, 수락산 둘레길 조성,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등의 협력사업 아이템이 발굴되었다. 따라서 생활권협의회, 즉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인 계획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.

3 결론 및 시사점

- 서울대도시권 차원에서 연계협력을 위하여 동북4구(강북, 노원, 도봉, 성북) 및 의정부, 남양주, 구리 등 서울시 인접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, 지역행복생활권의 추진을 통하여 지자체의 숙원사업과 인접 지자체 간 상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다.
- 이 연구에서는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지역 간 지리적, 기능적 연계성을 파악하고,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대도시권에의 적용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하였다. 이제는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.
- 이를 위하여 우선, 서울시와 경기도 차원에서 협의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. 둘째, 지역발전위원회는 서울대도시권 차원에서의 특성을 인정하고, 대도시권 사례로 시범 적용하는 등 연구 결과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. 이와 함께 지역행복생활권의 사후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. 마지막으로, 서울·인천·경기의 3개 시도연구원이 생활권 연구센터를 구성하여 개별 지자체를 연결하고 협력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.
- 향후 정부의 지역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행복생활권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과 더불어, 지속가능한 대도시권의 통합 관리를 위한 틀을 마련하여 시도를 뛰어넘는 (초)광역생활권 차원에서도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.